

국민의 에너지 주권을 팔지마라

정부가 발전공기업 주식을 상장, 민영화로 시작하려 합니다.

전기요금 올라갑니다 전기요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발전비용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전력을 생산하기 하루전 각 발전사가 시간대별로 전력을 입찰합니다. 그러면 전력거래소는 국가 전력수요를 예측, 발전량을 낙찰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 먼저 낙찰을 받으며 그 뒤 석탄화력이, 마지막으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에 들어온 발전소의 입찰한 가격이 시장의 전력가격이 됩니다. 이 경우 원자력과 석탄은 가스발전소보다 많은 차액을 남기게 되는데, 이 때문에 발전사 초과이익 방지와 전기요금 규제를 받는 한국전력과 재무균형을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산조정계수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원자력의 정산조정계수가 0.2이고 전력가격이 100원으로 결정된 경우 20원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변동비, 용량가격 등 기타 요소는 생략)

주주의 입장에서 발전회사에 대한 투자의 매력이 있으려면 발전회사 스스로 정산조정계수 등 가격 결정력이 있어야 하나 한국전력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따라야 하는 상황이고, 공공재인 전력가격을 상승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실적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없이 한국전력과 발전회사 모두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산조정계수는 관계사 간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으며, 발전회사의 주식공개가 실시될 경우 주주이익 침해로 인하여 경영진은 배임 등의 법적 소송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무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전기와 같은 공공재의 가격 억제는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을 온전히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IPO 대응팀 활동보고

- 2월16일 IPO 대응팀 발족
- 2월20일 국회 정문앞 민영화 반대 선전전 시작
- 2월21일
 -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민영화 반대 선전전
 - 제3차 에너지정책 조찬 간담회 관련,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의원실 방문하여 발전공기업 주식상장 반대 입장 전달
 - 농성장 방문한 김중운 의원과 발전공기업 민영화 대응에 대한 논의
- 2월27일
 - 국회 정문앞 민영화 반대 선전전
 - 남동발전 IPO 주관사 선정에 참여했던 NH증권사 노조위원장 및 회사 관계자와 미팅
- 3월16일 제64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전공기업 IPO(주식상장) 반대 투쟁 결의

전기는 공공재로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권리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외국자본 유입으로 국부 유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 외국계 배당도 3조가 넘어 국부유출이 심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1989년 IPO(주식상장) 이후 2015년까지 3조8277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2곳을 상장하면 수천억대의 배당금이 유출될 전망이며, 한수원을 포함한 발전 6사를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민간에 공개할 경우 그 배당액은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저성장인 경제상황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을 통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주식시장 활성화 및 해외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고배당 정책을 유도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식의 자본유출은 장기적으로 한전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기재부는 헛소리 하지마라

투명성 확보? 자율적 감사·감독 강화? 기획재정부는 투명성 확보, 자율적 감사·감독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한다고 합니다. ① 투명성 확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 ALLIO)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장기업의 정보공개시스템인 전자공시시스템(DART)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기획재정부가 애써 자신들의 업적을 폄하 하려는 의도가 궁금할 뿐입니다. ② 자율적 감사·감독? 이는 이미 상장된 공공기관의 감사·감독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3% 이상의 주식이 상장된 한전기술에서 발생한 원전비리, 40%의 주식이 상장된 한전산업개발 부사장의 배임과 횡령, 48%의 주식이 상장된 한전KPS의 퇴직자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일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I. 일반현황	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III. 대내외 평가	IV. 공공기관 장상화 추진
1. 일반현황	14. 대차대조표 (또는 요약 재무상태표)	26. 국회지적사항	38. 주요 12개 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II. 기관운영	15.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27.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39. 확립후생 관련 8대항목
2. 임직원수 현황	16. 수입 및 지출 현황	28. 경영실적 평가결과	- 제도운영 상황
3. 임원 현황	17. 주요사업 현황	29. 경영평가 지적사항	- 노조운영 지원비
4. 시급채용·유연근로 청년인턴	18. 투자집행 현황	30.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영리시설장비운영권
		31.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노조위탁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LIO

